IMPACT CONNECTOR · WEEKLY INTELLIGENCE BRIEFING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회사의 그릇을 다시 짜는 해 — 비랩의 첫 글로벌 최고경영자, 2020년 이후 멈춰 선 미국 사회적기업 법제, 그리고 '정상 상태'인 공익법인 3곳 중 1곳 4

전환계획에 이자율이 붙었다 — 공개 수준에 따라 0.8%포인트 갈린 차입금리, 목표가 제궤도인지 밝힌 기업은 3곳 중 1곳 6

화석연료의 마지막 수입을 어디에 쓰나 — 북해 가스전 승인과 함께 만든 영국의 20억 파운드 기금, 석탄 폐지를 앞둔 한국의 노동 전환 특별법 9

민주주의의 경제적 조건에 돈을 대다 — 포드재단의 전략 개편, '소유'에 투자하는 재단들, 그리고 광명이 받아 든 숙제 11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13

기업이 먼저 규제를 요구했다 —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촉구한 영국 유통 대기업, 폭염 기준을 구매 조건으로 바꾼 미국 농산물 구매자들 13

'100%'라는 숫자의 값 — 재활용 표시를 고친 코카콜라·네슬레·다논, 장바구니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 인증 상품, 그리고 구매 기준 3위 안에 넣는 소비자는 10명 중 1명 15

돌봄을 일자리로, 재정으로 — 가족에게 돌봄 임금을 주는 회사에 8,200만 달러, 장기요양 재정을 두 배로 늘린 스페인, 재원 분담을 묻는 한국 통합돌봄 17

신흥시장 임팩트 자본의 설계도 — 개발금융과 민간이 반씩 낸 중동·북아프리카 첫 임팩트 벤처펀드, 원금도 이자도 없는 인도의 사회증권거래소 채권, 그리고 '석탄 제외'의 각주 19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21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채점받기 시작한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이행점검 세부안, 개정 상법이 바꾼 자기주식 의결 기준 21

측정이 자본의 입장권이 될 때 — 임팩트 측정 자동화에 10억 원, 국민이 매기는 사회적가치 점수 23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5

05 이번 호 전망 26

06 지난 전망 점검 26

07 편집장의 글 26

① 이름표는 한 번, 관리는 매년 26

② 돈이 싸지는 조건이 바뀌었다 27

③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돈 27

THIS WEEK POINT

좋은 회사라는 '이름표'의 관리 비용이 드러났다. B 코프 인증을 운영하는 비랩이 2006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조직을 한 이사회 아래 묶고 첫 글로벌 최고경영자를 뽑았다. 같은 주 뉴욕대 로스쿨 연구진은 미국 주 의회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이 지난해 3건 발의돼 1건만 통과됐고, 콜로라도에 등록된 공익법인 3,000여 곳 가운데 정상 상태인 곳이 약 1,000곳뿐이라고 집계했다. 이름표를 붙이는 일보다 이름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 숫자로 나왔다.

전환계획에 이자율이 붙었다. 국제전환계획네트워크가 8,000여 개 기업을 분석했더니 기후전환계획을 충실히 공개한 기업의 차입금리가 평균 0.8%포인트 낮았다. 그런데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194개 기업 보고서를 읽어 보니 목표가 제 궤도인지 분명히 밝힌 곳은 33%였다. 계획을 공개하면 돈이 싸지는데, 진척을 밝히는 곳은 3곳 중 1곳이다.

돈의 출처를 바꾸는 손들이 있었다. 영국은 북해 가스전 승인과 함께 석유·가스 세수를 재원으로 한 20억 파운드 에너지 기금을 만들었고, 한국은 2027년 9월 16일 시행되는 석탄화력 노동자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 미국 포드재단은 약 180억 달러 기금의 지출 전략을 민주주의의 기초 조건 쪽으로 다시 짰다. 화석연료의 마지막 수입, 재단의 기금, 공공의 재정이 모두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기준으로 다시 배분되고 있다.

🔒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선언의 시대가 끝나고 '유지 비용'을 내는 시대가 왔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주 꼭지들은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장부에 묻는다. 인증은 받은 뒤에도 유지되는가, 전환계획은 세운 뒤에도 진척을 보고하는가, 화석연료 수입은 꺼지는 산업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가. 비랩이 지배구조를 하나로 합친 이유도, 콜로라도의 공익법인 3곳 중 2곳이 정상 상태가 아닌 것도, 전환계획을 공개한 기업이 이자를 덜 내는 것도 같은 원리다. 시장과 제도가 '처음 약속'보다 '계속 지키고 있다는 증거'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유지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둔 조직이다. 인증 갱신과 연례 보고를 운영 절차에 넣은 기업, 목표의 진척과 미달을 함께 공개하는 기업, 재원을 법과 기금으로 묶어 둔 정부가 그렇다. 불리해지는 쪽은 한 번

의 인증·한 번의 선언으로 평판을 산 조직이다. 등록만 하고 보고를 멈춘 공익법인, 협력사에 목표만 요구하고 지원하지 않은 원청, 전환의 비용을 다음 정부로 넘긴 재정 계획이 같은 압력을 받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치 측정·평가 도구와 공시 제도(제16조)가 법에 들어왔다. 시행령과 하위 지침이 만들어지는 지금이 '유지 비용'을 제도 안에 설계할 시점이다. 사회적기업이나 임팩트 조직은 인증 요건을 처음 맞춘 자료뿐 아니라 매년 같은 형식으로 갱신할 수 있는 자료 체계를 지금 만들 수 있고, 이 일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놓치기 쉬운 함정. 유지 비용을 강조하면 작은 조직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 콜로라도의 '정상 상태 아님'에는 문을 닫은 회사뿐 아니라 서류를 내지 못한 작은 회사도 섞여 있다. 보고 부담을 줄이는 공동 인프라 없이 유지 비용만 올리면, 남는 것은 보고 인력을 갖춘 큰 조직뿐이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회사의 그릇을 다시 짜는 해 — 비랩의 첫 글로벌 최고경영자, 2020년 이후 멈춰 선 미국 사회적기업 법제, 그리고 '정상 상태'인 공익법인 3곳 중 1곳

비랩은 21일 국제 개발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 온 피터 윌리엄스를 새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 그는 11월 2일부터 뉴욕에서 전 세계 조직을 이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의 마무리다. 비랩은 네덜란드에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하고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었으며, 지역별 거점을 하나의 글로벌 이사회 아래로 모으고 있다. 105개국 1만 1,000곳이 넘는 B 코프가 이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윌리엄스는 농촌 빈곤 문제를 다루는 국제농촌재건연구소를 2019년부터 이끌었고, 건축가로 출발해 주거 환경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단체를 직접 세운 경력이 있다.

영국 사회적경제 매체의 편집장은 기업 출신이 아니라 개발 협력 출신을 뽑은 것을 두고 "인권과 공급망 영향을 엄격히 따지는 새 기준과 함께 읽으면, 몇 년 전 다국적기업이 부정적 영향에도 인증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했다. 새 기준으로 처음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영국 반려동물 사료 회사 MPM 프로덕츠는 강화된 기준으로 재인증을 받았고, 프랑스 행사 매체는 영국 행사 대행사 두 곳이 130점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주 뉴욕대 로스쿨 그루닌 센터는 미국 법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정체'다. 2025년 주 의회에 발의된 사회적기업 형태 관련 법안은 3건이었고 그중 인디애나주의 '고용형 사회적기업' 1건만 3월에 통과됐다. 이런 종류의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미시시피주의 공익법인 법안은 9년 연속 부결됐다. 같은 해 반(反)ESG 법안은 27건, 친(親)ESG 법안은 4건이 통과·채택됐다. 연구진은 13개 관할에서 공개 기록을 확인해 공익법인 약 7,000곳을 셌는데, 콜로라도의 3,000여 곳 가운데 2026년 4월 기준 정상 상태인 곳은 약 1,000곳이었다.

기업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델라웨어는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형태의 효과가 "각 회사 정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결론짓고, 주 검찰의 감독 여력이 부족한 만큼 시민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했다. 멕시코 사회책임 매체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B 코프 10곳을 소개했는데, 1위 다논의 시가총액은 479억 7,000만 달러였다. 대기업이 이 이름표를 원할수록 이름표의 관리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7개국 10개 매체가 「B Lab·B Corp」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3.3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비랩의 인사·지배구조 내용은 영국·미국 매체의 보도 본문에서, 공익법인 집계는 뉴욕대 로스쿨 보고서를 소개한 미국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미국 공익법인보다 문턱이 높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는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를 둔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모두 요구하고, 상법상 회사라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공고한 심사기준은 일자리제공형에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10조는 신청 직전 6개월 영업수입이 총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확인은 신청 시점의 상태다. 콜로라도의 숫자가 보여 주듯 인증 뒤 몇 년이 지나면 실제 상태와 이름표 사이가 벌어진다. 국내 사회적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인증 요건 자료를 해마다 같은 형식으로 다시 내는 체계를 스스로 갖추는 것이 좋다.

> 🔒
> **심층 — 인증이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 되는 조건 (비랩 지배구조 개편 · 그루닌 센터 보고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왜 지금 중요한가.** 비랩의 개편과 그루닌 센터의 보고서는 같은 문제의 양면이다. 비랩은 지역마다 다른 해석과 운영을 하나의 이사회와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인증의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 그루닌 센터는 법이 만든 공익법인이라는 그릇이 등록 이후 관리되지 않아 숫자만 남는 현상을 보여 준다. 둘 다 '처음 인증할 때'보다 '인증 이후'가 약하다는 진단

이다. 반ESG 법안이 친ESG 법안보다 7배 가까이 많이 통과된 환경에서, 민간 인증과 법적 형태가 버티려면 내부 관리가 더 촘촘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새 기준을 일찍 통과한 기업이다. 인권과 공급망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먼저 통과한 회사는 거래처와 투자자에게 더 강한 증거를 갖는다. 정관에 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공익법인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이름표만 유지해 온 회사다.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공익법인 등록을 했지만 보고를 멈춘 회사는 오히려 '관리하지 않는 회사'라는 증거를 남긴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는 인증과 재정 지원이 따로 움직인다. 대구광역시의 2026년 2차 일자리창출사업 공고는 지원 기간을 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로 정했고, 신규 고용 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지원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은 인증서가 아니라 약정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이 끝나는 날과 고용 계약이 끝나는 날, 같은 기간의 영업수입과 고정비를 한 장에 놓고 해마다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쌓인 자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 법령이 측정·공시 체계를 정할 때 기준 설계 논의에 내놓을 근거가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엄격한 기준'은 비용을 만든다. 비랩의 새 기준은 공급망 인권 실사를 요구하는데, 작은 회사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일 수 있다. 엄격함이 대기업의 이름표 경쟁으로 바뀌면, 원래 이 운동이 키우려던 작은 사회적 기업이 오히려 밀려난다. 기준의 엄격함과 지원 인프라를 함께 보아야 한다.

출처: ESG Dive (미국, 2026-10) — B Lab names first CEO to lead B Corp Certification ·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The Editor's Post: What signal is B Lab's new CEO appointment sending? · Impact Entrepreneur (미국, 2026-10) — Grunin Center Report Finds Social Enterprise Law at a Plateau · ExpokNews (멕시코, 2026-10) — Certificación B Corp: las 10 empresas más grandes que apuestan por un impacto positivo · EVENEMENT.COM (프랑스, 2026-10) — Nouveau standard B Corp, Sledge et SWM Partners transforment l'événementiel écoresponsable · All Paws Industry (영국, 2026-10) — MPM Products among first to certify under new, stricter B Corp standards · 한국시니어신문 (한국, 2026-10) — 사회적기업 인증···시니어 월급과 고용을 보장할까

전환계획에 이자율이 붙었다 — 공개 수준에 따라 0.8%포인트 갈린 차입금리, 목표가 제 궤도인지 밝힌 기업은 3곳 중 1곳

국제전환계획네트워크는 21일 「부채비용 할인」 보고서를 냈다. 연구진은 전 세계 약 8,000개 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2016~2024년 기후전환계획 정보를 공개한 상장기업 3,300여 곳의 공시 수준과 금융 성과를 비교했다. 전환계획을 완전하게 공개한 기업은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기업보다 차입금리가 평균 0.8%포인트 낮았다. 기업 평균 이자율보다 약 11.7% 낮은 수준이다.

부채 규모가 중간인 기업이라면 연간 약 1,000만 달러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시 완성도가 1% 높아질 때마다 차입비용은 평균 0.15% 낮아졌다. 감축 목표를 계획대로 이행한 기업은 정보 공개 이후 1년간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이 0.582%포인트 높았고, 신흥시장에서는 1.577%포인트로 2.7배 컸다. 연구진은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을 낼 필요는 없고 항목을 하나씩 채워 가는 과정에서도 재무적 이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빈 곳이 많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194개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한 「리포팅 매터스 2026」에서 중대성 평가를 하는 곳은 92%, 이 중 중대성을 명시한 곳은 78%였지만, 전환계획을 제시한 곳은 60%, 목표가 제 궤도인지 분명히 보고한 곳은 33%, 성과가 뒤처진 영역을 투명하게 밝힌 곳은 45%였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워크데이의 사례가 이 간극을 보여 준다. 워크데이는 2020년 무렵 구매액 기준 협력사의 70%가 자체 감축 목표를 세우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6 회계연도 말 실제 비율은 24%로 전년보다 조금 낮았다.

다른 두 약속(사무실·데이터센터 전력의 재생에너지 매칭, 출장 배출 25% 감축)은 지켰고, 출장 배출은 31% 줄였다. 워크데이는 실패를 공개한 뒤 새 목표를 냈다. 2025년 대비 2031 회계연도까지 직접 배출과 전력 배출을 42% 줄이고, 구매·자본지출·출장 부문은 매출 1달러당 52% 줄인다. 직원 사이의 신뢰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 호주 커틴대 응용윤리센터가 직원 2,048명을 조사했더니 97%가 대기업에 기후 대응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57%는 회사가 공개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이 있다고 본 사람은 14%였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전환계획·transition plan」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차입금리 분석은 국제전환계획네트워크 보고서를 옮긴 국내 매체 본문에서, 194개 기업 보고서 분석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료를 옮긴 네덜란드 매체 본문에서, 워크데이 수치는 미국 지속가능경영 매체의 인터뷰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한국 정부는 10월 7일 2026~2035년 10년 동안 정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 리걸앤드제너럴 자산운용 관계자는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확신"이라며 한국 기업의 탄소중립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코스피 상장사 807곳을 대상으로 시범 산출한 기후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피와 비슷한 수익률에 탄소집약도는 절반이었다. 1,000조 원이 실제로 어디로 갈지는 기업이 전환계획의 진척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다.

> 🔒

심층 — '계획을 냈다'와 '진척을 보고한다' 사이의 금리차 (국제전환계획네트워크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워크데이 · 커틴대)

왜 지금 중요한가. 지난 호 이 지면은 투자자들이 ESG 점수 대신 자체 조사와 직접 대화를 신뢰한다는 조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신뢰가 실제 가격으로 바뀌는 지점을 보여 준다. 대출 기관과 채권 투자자는 전환계획을 '얼마나 좋은 계획인가'보다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로 읽는다. 완성도 1%마다 차입비용이 0.15% 낮아진다는 결과는 공시가 홍보가 아니라 재무 행위라는 뜻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미달까지 보고하는 기업이다. 워크데이는 협력사 목표 70% 약속을 24%로 지키지 못했다고 밝히고 새 목표를 다시 검증받았다. 이런 기업은 다음 약속의 신뢰를 산다. 불리해지는 쪽은 계획 문서는 두껍지만 진척 보고가 없는 기업이다. 194개 기업 중 목표 진척을 분명히 밝힌 곳이 33%라는 숫자는, 나머지 67%가 금리 할인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정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000조 원을 계획한다. 국내 상장사와 중견기업은 이 돈이 정책금융·은행 대출·채권으로 풀릴 때 '전환계획 공개 수준'이 심사 기준이 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감축 목표마다 기준연도·중간 목표·연도별 실적을 한 표에 정리하고, 미달 항목과 원인을 함께 적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 807곳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시범 지수가 고탄소 기업을 일률적으로 빼지 않고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철강·석유화학 기업도 진척 보고만으로 평가를 바꿀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금리 할인 결과는 상관관계다. 재무 상태가 좋은 대기업일수록 공시 역량도 크기 때문에, 공시가 금리를 낮췄는지 좋은 기업이 공시도 잘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보고서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공시만 늘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기대하면, 형식만 채운 보고서가 늘어날 수 있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기후전환계획 충실히 공개한 기업, 차입금리 0.8%p 낮아… 8000개사 분석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0) — Reporting Matters 2026 (WBCSD): Slechts 33% van de bedrijven geeft aan dat de doelstellingen op schema liggen · Trellis (미국, 2026-10) — Inside Workday's second round of science-based targets · HRM Asia (싱가포르, 2026-10) — Employees in Australia back corporate climate action but few trust their employer's progress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韓国】政府、10年間で1000兆ウォンのGX投資・金融支援戦略発表 · IMPACT ON (한국, 2026-10) — K-GX 1000조원 기후금융 시대…글로벌 투자자, 자금 규모보다 이행 신뢰 강조

화석연료의 마지막 수입을 어디에 쓰나 — 북해 가스전 승인과 함께 만든 영국의 20억 파운드 기금, 석탄 폐지를 앞둔 한국의 노동 전환 특별법

영국 정부는 이번 주 북해의 잭도 가스전 생산을 승인하면서 '에너지 부(富) 기금'을 함께 발표했다. 국가부기금 안에 두는 이 기금은 20억 파운드로 시작하고, 북해 석유·가스 세수를 앞으로 계속 넣어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 잭도는 정점 생산기 영국 국내 가스 생산을 약 6%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 탐사 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유지하되 기존 가스전은 수명 동안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영국 일간지의 경제 칼럼은 2025년 영국 에너지의 75%가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서 나왔고, 전체 에너지의 약 43%를 수입했으며, 히트펌프를 쓰는 가구는 2%가 안 된다는 수치를 들어 이 결정을 '현실적'이라고 평했다. 같은 주 유럽투자은행그룹은 2030년까지 기후 적응에 최소 3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5년의 두 배 속도이며, 적응에 1유로를 쓰면 최대 10유로의 경제적 편익이 생긴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아시아에서도 같은 질문이 제도로 옮겨 가고 있다. 필리핀 대통령은 13일 국가 탄소시장 정책 체계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환경자연자원부가 국내외 탄소시장 참여 규칙을 정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거래를 함께 다룬다. 한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4개 의원실과 함께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고용노동부가 고시안을 준비 중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가 중심 의제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론회 의견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한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과 특별법 하위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5개 매체가 「Jackdaw·Rosebank·North Sea」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기금의 구조는 정부 발표를 옮긴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영국 에너지 구성 수치는 영국 일간지 칼럼 본문에서, 한국 특별법 일정과 토론회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한국의 석탄 전환은 재원보다 일정이 먼저 정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은 2027년 9월 16일 시행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되고 있다. 영국이 화석연료 세수를 기금으로 묶은 방식은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준다.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에 참여해 고용 안정 방안을 논의한 만큼, 국내 임팩트 투자자와 지역 재단은 석탄발전소

가 있는 지역의 직업훈련·전환 사업에 어떤 재원 구조가 필요한지를 지금 제안할 수 있다.

🔒

심층 — 전환의 비용을 꺼지는 산업의 수입으로 치르는 설계 (영국 에너지 부 기금 · 유럽투자은행 적응 계획 · 필리핀 탄소시장 · 한국 석탄화력 특별법)

왜 지금 중요한가. 기후 정책의 오랜 약점은 비용과 편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생산의 이익은 기업과 세수로 가고, 전환의 비용은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이 진다. 영국의 기금은 그 흐름을 하나의 장부로 묶는다. 가스전 승인이 기후 단체의 반발을 사는 결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지만, 그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를 법적 구조로 정해두면 논쟁의 대상이 '생산 여부'에서 '수입의 용도'로 옮겨 간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재원과 일정을 함께 가진 전환 정책이다. 영국은 기금을 국가부기금에 넣어 투자 집행 주체를 정했고, 유럽투자은행은 중소기업과 농민이 적응 투자를 찾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불리해지는 쪽은 일정만 있고 재원이 없는 계획이다. 법은 시행일을 정했지만 노동자 직업훈련과 지역 지원의 재원이 매년 예산 협상에 맡겨지면,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2일 토론회 결과를 특별법 하위 법령과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지금이 재원 구조를 넣을 수 있는 시점이다. 국내 임팩트 투자자, 지역 재단, 사회적금융 기관은 발전 공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재교육·창업·지역 고용을 대상으로 한 혼합금융 구조(공공재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고 민간이 뒤따르는 구조)를 토론회 참여 노조, 고용노동부, 해당 지방정부와 함께 설계해 제안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화석연료 수입으로 전환 기금을 만든다'는 구조는 화석연료 생산을 연장할 명분이 될 수 있다. 영국 칼럼도 이 결정을 실용론으로 옹호했지만, 기금이 커질수록 생산을 줄일 동기는 약해질 수 있다. 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생산 감축 일정과 함께 공개되는지 보아야 한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UK Channels Oil & Gas Revenues into New £2 Billion Clean Energy Wealth Fund · The Guardian (영국, 2026-10) — Jackdaw approval is a step towards a grownup North Sea policy · ESG Today (국제, 2026-10) — EIB Unveils €30 Billion Climate Adaptation Plan ·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0) — Philippine president orders creation of carbon market framework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한국, 2026-10) —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민주주의의 경제적 조건에 돈을 대다 — 포드재단의 전략 개편, '소유'에 투자하는 재단들, 그리고 광명이 받아 든 숙제

포드재단은 22일 이사회에 보고한 새 전략에서 지출의 방향을 민주주의의 기초 조건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약 180억 달러 기금을 가진 이 재단은 민주적 거버넌스, 포용적 경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공 안전, 성평등, 국제 협력, 인종 정의의 7개 프로그램을 내년에 걸쳐 구체화한다. 취임 1년이 안 된 헤더 거켄 회장은 "법치가 없고 선거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 재단이 아끼는 다른 모든 가치와 사업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2015년 불평등을 중심에 둔 개편 이후 가장 큰 변화이며, 재단은 더 크고 여러 해에 걸친 일반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비영리 조사기관 캔디드에 따르면 민주주의 관련 재단 지원은 2016~2020년 세 배로 늘었다.

미국 임팩트 투자 업계는 이 흐름을 '민주주의의 경제적 결정 요인'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미국 임팩트투자연합의 프랜 시걸은 주택과 사업체 소유, 일터에서의 발언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쌓을 기회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단과 의지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난 호 이 지면이 기금의 93%를 사명에 맞췄다고 전한 우드콕재단은 그 원칙을 투자로 옮기고 있다. 직원 소유 전환을 돕는 금융사, 이동식 주택 거주자들이 함께 땅을 사들여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지역 대출기금, 방치된 상가를 사들여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는 시카고의 펀드에 투자했다.

같은 주 한국 매체는 13일 광명에서 열린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다시 짚었는데, 1부 발표자 가운데 한 명이 미국 '협력하는 민주주의'의 글로벌 총괄 책임자였다. 포럼에서 소개된 영국 노스에어셔 의회는 2025~2026년 외부 공급업체 지출의 약 31%인 8,520만 파운드를 관할 구역 안 업체에 썼다. 지난 두 호에 걸쳐 이 지면이 따라간 광명의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하겠다'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무엇으로 재나'로 넘어갔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의 2개 매체가 「democracy·philanthropy·foundation」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포드재단의 전략은 미국 자선 전문 매체에 실린 통신 기사 본문에서, 우드콕재단의 투자처는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본문에서, 광명 포럼과 노스에어셔 수치는 국내 사회적경제 매체의 기획 기사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광명시는 4월 조례로 기본계획·시행계획과 평가 체계,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14개 기관이 참여한 앵커기관 협약을 맺었으며, 12월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관내 약 2,800개 기업의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공공재정 집행 데이터 1만 6,510건을 분석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광명사랑화폐는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넘겼다. 국내 지역제한경쟁 입찰은 올해 4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기준액이 150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광명이 12월 성과지표에 '지역 안에 남은 지출 비율'과 함께 지역 업

체의 고용·임금을 넣는다면, 미국 재단들이 말하는 '소유와 참여'를 한국 지방정부가 숫자로 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

심층 — '소유'가 사회적 성과 지표가 될 때 (포드재단 · 미국 임팩트투자연합 · 우드콕 재단 · 광명 지역공동체 자산화 포럼)

왜 지금 중요한가. 재단과 임팩트 투자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선거 감시나 시민 교육 같은 직접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집과 가게와 일터의 지분을 누가 갖는가를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본다. 미국 임팩트투자연합은 대형 연기금처럼 시장 전체를 보유한 투자자는 소비 수요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을 분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투자 위험 관리의 언어로 들어온 것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소유 구조를 바꾸는 금융이다. 직원 소유 전환 금융, 공동체 토지 매입, 지역 자산화 펀드는 재단 기금의 새 투자처가 된다. 포드재단이 일반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현장 단체에는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짧은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를 보고해 온 단체다. 재단이 '조건'을 바꾸는 장기 사업에 무게를 두면, 한 해 단위 산출물 중심의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광명시가 12월까지 개발하는 성과지표는 한국에서 이 논리를 시험할 가장 가까운 자리다. 광명·안성·대전 중구·영암은 같은 포럼에서 지역 우선구매와 금고 선정의 재량 확대를 함께 요구했다. 국내 임팩트 투자자와 지역 재단은 이 지자체들과 '지역 몫'의 정의(시·생활권·광역 세 단계)와 고용·임금 같은 질 지표를 함께 설계하고, 지역 자산화 사업에 장기 저리 자금을 대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후속 제도에 이 지표를 넣자고 제안하는 일도 지금 가능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지역에 남는 지출 비율은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포럼에서 소개된 영국 프레스턴은 시 경계 안에서 5%에서 18.2%로, 주 전체로는 39%에서 79.2%로 늘었다. 같은 정책도 숫자가 네 배 차이 날 수 있다. 몫이 커졌다는 사실이 지역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뜻도 아니다.

출처: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10) — The Ford Foundation will throw more weight behind democracy · ImpactAlpha (미국, 2026-10) — Investing in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democracy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광명 국제포럼이 남긴 질문 : 사회연대경제는 어떻게 지역순환경제가 되는가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기업이 먼저 규제를 요구했다 —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촉구한 영국 유통 대기업, 폭염 기준을 구매 조건으로 바꾼 미국 농산물 구매자들

지난 호 이 지면은 애플과 H&M이 기준 미달 공장과의 거래를 끊는 방식을 전했다. 이번 주에는 기업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에 법을 요구했다. 막스앤스펜서, 아스다, 아소스, 세인즈버리, 알디 등 영국 유통 대기업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32개 조직은 21일 공개된 공동 서한에서 총리에게 이번 의회 회기 안에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윤리무역이니셔티브와 영국소매협회, 기업정의연합이 이 서한을 이끌었다.

이들은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나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를 조달해도 영국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공급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현대판노예법이 요구하는 공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도 댔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약 40%가 기본 보고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영국 파비안협회는 노동착취와 환경 피해로 인한 영국 내 경제적 손실을 연간 44억 파운드로 추산했다. 윤리무역이니셔티브 사무총장은 "논의는 입법 여부에서 어떻게 입법할지로 옮겨 갔다"고 말했다.

스페인 지속가능경영 책임자 협회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2024/1760)을 기업 경영 체계에 넣는 방법을 담은 실무 도구집을 냈다. 이 도구집은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회사는 평가와 정보 요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흐름은 임금 문제와도 이어진다. 프랑스 지속가능경영 매체에 따르면 지난 호에 전한 클린클로스캠페인의 의류 브랜드 110곳 평가에서 공개적으로 생활임금을 약속한 곳은 32%였지만, 2019년 이후 실질적 진전을 보인 곳은 4%, 기한이 있는 실행 계획을 공개한 곳은 3%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임금은 생활임금보다 73% 낮았다. 약속과 실행 사이의 이 간격을 법으로 메우자는 요구가 이번에는 기업 쪽에서 나왔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6개 매체가 「due diligence·CSDDD」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공동 서한 내용은 지구의벗 발표를 옮긴 국내 ESG 매체 본문에서, 스페인 도구집은 스페인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의류 브랜드 평가는 프랑스 지속가능경영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영국 유통기업의 실사 요구는 국내 수출 제조업의 일이다. 아소스는 지난 2월 잘란도, 뉴룩 등 유통기업 6곳과 함께 의류·신발 협력사의 인권·환경 실사 수준을 평가하는 공동 질문서와 디지털 플랫폼을 내놓았다. 협력사가 유통사마다 따로 내던 자료를 하나의 양식으로 쓰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 중견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아디다스 신발을 생산하며, 신발 제조 매출의 98% 이상이 수출에서 나온다. 아디다스는 재하청업체까지 행동규범을 적용하고 지난해 협력사에 경고장 21건을 보냈다. 영국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자료 제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

심층 — 왜 기업이 규제를 원하는가 (영국 32개 조직 공동 서한 · 파비안협회 추산 · 스페인 실사 도구집 · 클린클로스캠페인)

왜 지금 중요한가. 공급망 실사 규제는 보통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기업이 반대하는 의제였다. 이번 서한은 그 구도를 바꾼다. 이미 공급망 관리에 돈을 쓰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가 불공정 경쟁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는 비용도 크다.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맞춘 공통 기준을 요구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의 표준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이미 실사 체계를 갖춘 유통사와 그 체계에 자료를 낼 수 있는 협력사다. 아소스가 주도한 공동 질문서처럼 자료 형식이 통일되면, 한 번의 실사 자료로 여러 고객사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는다. 불리해지는 쪽은 실사 자료를 내지 못하는 협력사와, 지금까지 실사에 비용을 쓰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앞서 온 기업이다. 법이 생기면 그 가격 우위가 사라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기업의 공급망도 이미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유럽 매체 탐사보도는 2001년 이후 약 2,360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진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광석이 중국 제련 기업을 거쳐 LG화학의 합작 법인으로 흘러갔을 정황을 제기했다(취재진은 특정 배터리 완제품에 직접 투입됐다는 물적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승엔터프라이즈처럼 해외 공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국내 중견기업은 아디다스의 경고장 사유(무단 재하청, 임금·근로시간 위반, 안전보건)를 체크리스트로 삼아 자체 점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영국 법의 입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할 일은 유럽 고객사가 쓰는 공동 질문서 양식에 맞춘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다. 국내 업종 협회가 회원사 공동 양식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공동 서한이 곧 법은 아니다. 영국 산업혁신과학무역부는 기업책임경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정책 방향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또 실사 의무화는 거래 중단이라는 쉬운 길을 열 수도 있다. 위험한 공장과 거래를 끊으면 보고서는 깨끗해지지만, 그 공장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영국 M&S·아스다·아소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촉구 · Corresponsables (스페인, 2026-10) — Una guía de DIRSE facilita integrar la diligencia debida europea en la gestión de derechos humanos y medioambiente · Novethic (프랑스, 2026-10) — LVMH, Zara, Uniqlo : les géants de la mode en retard sur les salaires décents · IMPACT ON (한국, 2026-10) — 【리스크 모니터링】 LG·현대차 인니 니켈 공급망 산림파괴 의혹,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 환경허가 무효

'100%'라는 숫자의 값 — 재활용 표시를 고친 코카콜라·네슬레·다논, 장바구니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 인증 상품, 그리고 구매 기준 3위 안에 넣는 소비자는 10명 중 1명

지난 호 이 지면이 전한 유럽연합 그린워싱 방지 지침이 시행된 뒤, 이와 별도로 진행돼 온 소비자 당국의 조사에서 세계적인 식음료 대기업들이 표시를 바꾸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2일 코카콜라, 네슬레, 다논이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와의 협의를 거쳐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관련 표시를 고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유럽소비자기구와 13개국 소비자단체의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병'이라는 문구를 쓸 때는 뚜껑과 라벨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같은 글자 크기로 바로 옆에 적어야 하고, '다시 재활용해 주세요'는 '재활용해 주세요'로 바뀐다. 각국 소비자 보호 당국이 이행을 점검하고, 집행위원회는 다른 대형 음료병 업체의 표시 관행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소비자기구 추정으로 유럽연합의 페트 음료병 재활용률은 약 55%이고, 쓴 병이 다시 병이 될 가능성은 약 30%다. 독일 보험협회는 15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독일 보험사의 87%가 환경 관련 대외 설명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가 정밀해지는 사이, 소비자의 선택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네덜란드 컨설팅사 롤랜드버거가 소비자 1,300명을 조사했더니 지속가능성을 구매 기준 상위 3개 안에 넣은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다. 따로 물으면 40%가 더 비싸도 지속가능한 제품을 사겠다고 했지만, 가격·맛·건강과 함께 놓고 고르게 하면 순위가 떨어졌다. 그런데 같은 주 시장조사기관 서카나의 집계를 보면 2026년 상반기 네덜란드 슈퍼마켓에서 지속가능성 인증 상품 매출은 약 50억 유로로 전체 식품 매출의 25.7%였다. 인증 상품 매출은 2.6% 늘어 전체 시장(2.0%)보다 빨리 자랐고, 달걀과 수산물은 80% 이상, 육류와 따뜻한 음료는 60% 이상이 인증 상품이었다. 소비자가 고른 결과라기보다 유통사가 기본 진열을 바꾼 결과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11개국 21개 매체가 「그린워싱·greenwashing」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4건이다. 음료 3사의 시정 내용은 집행위원회 발표를 옮긴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네덜란드 소비자 조사와 인증 상품 매출은 네덜란드 지속가능경영 매체 본문에서, 독일 보험업계 수치는 독일보험협회 보고서를 옮긴 국내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표시의 정밀함은 국경을 넘는 인증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 운영기관 ICMQ와 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탈리아는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건축 분야 공공조달에도 쓴다. 다만 이번 협약은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단계여서 국내 인증이 이탈리아에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친환경'이라는 말 대신 정량 정보로 주장을 바꿔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심층 — 소비자는 고르지 않는다, 기본값이 고른다 (유럽연합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 · 독일보험협회 · 롤랜드버거 · 서카나)

왜 지금 중요한가. 그린워싱 규제는 '말'을 정확하게 만든다. 하지만 네덜란드 자료는 정확한 말이 소비자 선택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소비자 10명 중 1명만 지속가능성을 상위 기준으로 꼽는데도 인증 상품이 매출의 4분의 1을 넘은 이유는 유통사가 달걀과 수산물 같은 품목에서 인증 상품을 기본 진열로 바꿨기 때문이다. 표시 규제와 기본값 설계가 함께 움직일 때 시장이 바뀐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정량 근거를 가진 기업과 유통 채널을 쥔 기업이다. 재활용 비율을 병 본체와 뚜껑으로 나눠 말할 수 있는 회사, 인증 상품을 기본값으로 정할 권한을 가진 슈퍼마켓이 판을 정한다. 불리해지는 쪽은 '100%' 같은 큰 숫자로 이미지를 만든 브랜드와, 소비자 선택에 기대 친환경 프리미엄을 붙이려던 중소 브랜드다. 소비자가 웃돈을 내지 않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식품·소비재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다른 음료병 업체로 점검을 넓히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포장의 재활용 문구를 부품별로 점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증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성적표지가 10월 22일 협약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동안 건축자재·전자제품 수출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정보를 유럽 고객사 요구 양식에 맞춰 두는 것이 실익이 크다. 국내 대형 유통사는 네덜란드처럼 특정 품목에서 인증 상품을 기본 진열로 바꾸는 방식을 시험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정확한 표시가 늘어나면 반대로 '말하지 않는' 기업도 늘어난다. '그린 허싱'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규제가 무서워 성과를 알리지 않으면 시장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릴 정보를 잃는다. 표시 규제가 침묵을 부르지 않도록, 검증된 정량 주장에는 오히려 보상이 돌아가는 설계가 필요하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Coca-Cola, Nestlé, and Danone Agree to Improve Recycling Claims Following EU Greenwashing Complaint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0) — Slechts 1 op de 10 consumenten noemt duurzaamheid in hun top drie van aankoopcriteria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0) — Producten met duurzaam keurmerk goed voor méér dan een kwart van de supermarktomzet · IMPACT ON (한국, 2026-10) — EU 그린워싱 규제에 독일 보험업계 87% 홍보 수정 계획…기업 대응은? · 전기신문 (한국, 2026-10) — 환경산업기술원, 국산 환경성적표지 이탈리아 상호인정 추진

돌봄을 일자리로, 재정으로 — 가족에게 돌봄 임금을 주는 회사에 8,200만 달러, 장기요양 재정을 두 배로 늘린 스페인, 재원 분담을 묻는 한국 통합돌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애비케어는 이번 주 8,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다. 트랜스포메이션캐피털이 주도했고 CVS헬스벤처스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의 피보털이 참여했다. 이 회사는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조무사나 재가 돌봄 인력으로 훈련시켜, 가족이 돌봄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한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뉴저지 등의 메디케이드 위탁 관리기관과 계약해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약 6,300만 명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집에서 돌보고 있고 대부분 무급이다. 회사는 회원들의 첫해 입원이 40% 적었다고 밝혔다. 창업자는 베트남 이민자인 조부모를 돌본 경험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무급 돌봄을 임금 노동으로 바꾸는 모델에 벤처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간 것이다.

스페인은 같은 문제를 공공 재정으로 풀고 있다. 사회권부가 19일 공개한 장기요양 체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한 긴급 법령으로 2026~2027년 장기요양 재정에 62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된다. 국가가 자치정부에 보내는 최소 보호 수준 지원액은 2등급에서 100%, 3등급에서 128%, 1등급에서 18% 늘었고 7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기 명단은 역대 최저로 줄었고 처리 기간은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단축됐다. 9월 16일 의회를 통과한 장기요양·장애 법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요양 투자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사회권부는 자치정부에 2027년까지 대기 명단을 절반으로 줄이고 2028년까지 없애라고 요구했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15개 매체가 「caregiver·통합돌봄」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5건이다. 애비케어 투자 내용은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본문에서, 스페인 장기요양 재정은 스페인 사회서비스 전문 매체가 옮긴 사회권부 발표 본문에서, 한국 통합돌봄 포럼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보건복지부는 20일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포럼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함께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

고, 전남연구원은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분석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과 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 조정을 제안했다. 스페인이 국가 분담 50%를 법에 넣은 것처럼, 한국도 중앙·지방 분담 비율을 법령에 명시할지가 다음 쟁점이다. 국내 돌봄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자는 가족 돌봄을 유급화하는 모델이 국내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제도와 어떻게 겹치고 다른지부터 따져 볼 수 있다.

🔒

심층 — 돌봄이 투자 대상이 되는 두 경로 (애비케어 · 스페인 장기요양 재정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포럼)

왜 지금 중요한가. 돌봄은 오랫동안 '비용'으로만 계산됐다. 애비케어 투자와 스페인 재정 확대는 돌봄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산화한다. 미국은 공공보험이 지급하는 돌봄 수가를 가족에게 연결하는 사업으로, 스페인은 국가가 재정 분담을 법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두 방식 모두 무급으로 남아 있던 돌봄 노동을 측정하고 대가를 붙인다는 점에서 같다.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 돌봄 인력 부족은 재정 문제이면서 노동 문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공공 재원과 연결된 돌봄 사업자다. 애비케어의 수익은 메디케이드 위탁 관리기관과의 계약에서 나오고, 스페인의 재정 확대는 자치정부와 계약한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물량을 늘린다. 입원 감소 같은 성과를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자가 계약을 따낸다. 불리해지는 쪽은 성과 자료 없이 시간 단위로만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 그리고 가족 돌봄을 유급화할 때 돌봄의 질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체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보건복지부가 포럼을 마무리한 만큼 다음 단계는 2027년 예산과 재정 분담 기준의 확정이다. 국내 돌봄 사회적기업, 지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팩트 투자자는 이 시점에 '입원 감소', '재가 기간 연장' 같은 성과 지표를 미리 갖춰 두면 지방정부 위탁 계약에서 유리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0일 60세 이상 수급자의 긴급생활자금 대부(실버론) 예산을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85억 원 늘린 것도 돌봄·의료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단서다.

놓치기 쉬운 함정. 가족 돌봄의 유급화는 돌봄을 다시 가족, 특히 여성에게 묶어 둘 수 있다. 공식 돌봄 인력을 늘리는 대신 가족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확산되면, 돌봄 노동의 전문화와 처우 개선이 늦어진다. 입원 감소 같은 성과도 회사가 밝힌 수치여서 독립된 검증이 필요하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Abby Care raises $82 million to pay family members to care for loved ones at home · Balance Sociosanitario (스페인, 2026-10) — Nuevo Panel del SAAD: los gobiernos autonómicos recibieron más de 700 millones de euros adicionales para la dependencia entre julio y septiembre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국, 2026-10) —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신흥시장 임팩트 자본의 설계도 — 개발금융과 민간이 반씩 낸 중동·북아프리카 첫 임팩트 벤처펀드, 원금도 이자도 없는 인도의 사회증권 거래소 채권, 그리고 '석탄 제외'의 각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초기 단계 임팩트 벤처펀드가 생겼다. 20년 동안 이 지역 사회적 기업에 기술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해 온 벤처 자선단체 알파나르에서 분사한 아나라 임팩트캐피털은 올해 첫 펀드를 4,800만 달러로 1차 마감했다. 자금은 개발금융기관과 민간이 50대 50으로 나눠 냈다. 개발금융 쪽은 독일재건은행과 유럽연합이, 민간 쪽은 사우디 패밀리오피스와 요르단 모태펀드, 걸프·요르단·레바논·이집트·튀니지·팔레스타인의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투자 분야는 교육, 웰빙, 기후다. 운용역은 "개발금융만으로 채우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 임팩트 투자가 시장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달 요르단 암만에서는 첫 아랍 임팩트 서밋이 열렸다.

인도에서는 국립농업농촌개발은행이 국가기술개발공사가 국립증권거래소 사회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무이표·무원금' 증권에 4크로르 루피를 넣었다. 마디아프라데시주 농촌 청년 600명을 일본과 독일에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수료가 아니라 실제 해외 취업과 고용 유지를 성과로 삼고 독립 검증을 붙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TPG의 글로벌 사우스 기후 전략에 최대 1억 달러를 넣기로 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싱가포르 3대 은행인 DBS, OCBC, UOB는 2019년 신규 석탄 금융 중단을 발표했지만, 환경 금융 감시단체 마켓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25년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등에 딸린 '자가발전용 석탄' 설비를 가진 산업 그룹에 자금을 댔다. DBS는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각주에서 자가발전 석탄을 노출액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랄대 연구진은 비교 가능한 6개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이 2023~2025년 실질 기준 17.2% 줄었고, 사회·녹색 대출 상품 49개 중 집행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것은 29개뿐이라고 집계했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5개 매체가 「Global South·impact VC·Social Stock Exchange」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나라 펀드 구조는 영국 사회적경제 매체의 인터뷰 본문에서, 인도 사회증권거래소 상장은 인도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싱가포르 은행 사례는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본문에서, 아르헨티나 수치는 현지 사회책임 매체가 옮긴 대학 연구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라벨과 실제 배분의 차이'는 한국 공공 금융에서도 확인됐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올해 1~9월 지원액 8조 1,122억 원 가운데 90.9%가 대기업에 갔고, 중견기업은 5.3%, 중소기업은 1.3%였다. 정부가 지정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216곳 중 72.7%가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이들이 받은 몫은 8.6%였다. 중소·중견기업용 500억 원 특별한도는 144억 원만 집행돼 소진율이 28.8%였다. 아르헨티나 은행들처럼 '지속가능' 또는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공개하는 일이 국내 정책금융에서도 필요하다.

🔒

심층 — 혼합금융이 '증명'을 설계하는 방식 (아나라 임팩트캐피털 · 인도 사회증권거래소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싱가포르 은행 석탄 정책)

왜 지금 중요한가. 신흥시장 임팩트 금융은 오랫동안 개발 원조와 자선에 기대 왔다. 이번 주 사례들은 공공 자금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나라는 개발금융과 민간 자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 상업적 수익 가능성을 증명하려 하고, 인도 사회증권거래소 증권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취업이라는 성과를 독립 검증으로 보여 준다. 동시에 싱가포르 은행 사례는 정책 문구의 작은 예외가 얼마나 큰 자금 흐름을 허용하는지 보여 준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성과를 검증 가능한 단위로 쪼갠 사업이다. '농촌 청년 600명의 해외 취업과 고용 유지'처럼 성과가 분명하면 사회증권거래소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의 보증을 앞세워 민간 자본을 모으는 운용사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정책 각주에 기대 온 금융기관이다. 감시단체가 각주를 읽기 시작하면, 넓은 예외 조항은 평판 위험이 되고 거래소 민원 같은 공식 절차로 이어진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리고 공급망 상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사회적금융 기관과 임팩트 투자자는 올해 1~9월 90.9%였던 대기업 비중이 실제로 내려가는지를 분기별로 추적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나 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자금이 민간 임팩트 펀드와 짝을 이루는 구조를 설계한다면, 아나라처럼 공공과 민간 비율을 명시하고 성과 검증 방식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혼합금융은 공공이 위험을 떠안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쉽다. 공공 자금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비율과 민간이 가져가는 초과 수익의 상한이 공개되지 않으면, 혼합금융은 공공 보조금의 다른 이름이 된다. 성과 검증도 누가 비용을 대는지에 따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출처: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Investor in focus: How Anara Impact Capital is pioneering impact VC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India CSR (인도, 2026-10) — NABARD Supports Landmark Social Stock Exchange Listing for Overseas Skilling and Employment of 600 Youth · ESG Today (국제, 2026-10) — AIIB Invests $100 Million in TPG's Global South-Focused Climate Solutions Strategy · ImpactAlpha (미국, 2026-10) — Singapore's banks find a coal financing 'loophole'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10) — Cae el financiamiento sostenible en Argentina y tres bancos concentran la mayor parte de los recursos · IMPACT ON (한국, 2026-10) — [국감 ESG 브리핑]공급망기금 91% 대기업에…제주는 "재생에너지 다음은 전력망"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채점받기 시작한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이행점검 세부안, 개정 상법이 바꾼 자기주식 의결 기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2025년 7월 22일, 9월 9일, 2026년 3월 6일 공포)을 국내·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국민연금은 회사가 이 계획을 주총에 올리면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일관되는지,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따져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때 찬성하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예외를 정관에 넣는 안건이 올라오면,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함께 본다.

같은 회의에서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이행점검 체계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 자신이 그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적 자본의 관리 체계를 둘러싼 질문은 같은 주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0월 1일 첫 대미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2일 뒤인 13일에야 처음 열렸고,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6개 매체가 「국민연금 수탁자·스튜어드십·stewardship」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

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기금위 의결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 내용은 국내 ESG 매체의 국감 정리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이번 의결은 국내 상장사의 주총 안건 준비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찬성할지 여부는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으로 판단되므로,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목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두어야 한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가 정한 예외 사유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와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이 들어 있다. 직원 소유를 넓히려는 기업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우리사주로 돌릴 근거를 갖게 됐지만, 그 계획이 일반주주에게 설득력 있는지를 국민연금이 따져 본다. 위탁운용사는 앞으로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

심층 — 감시하는 쪽이 감시받는 구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점검 · 개정 상법 제341조의4 · 한미전략투자공사)

왜 지금 중요한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은 대개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로 이야기된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반대 방향이다.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지난 호까지 이 지면이 다룬 'ESG 평가를 평가하는' 흐름이 한국의 가장 큰 공적 자본에도 들어온 셈이다. 같은 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례는 반대로, 자금이 먼저 나가고 관리 체계가 뒤따를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 보여 줬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자기주식과 지배구조 안건을 미리 일관되게 공시해 온 상장사, 그리고 의결권 행사 기록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남겨 온 위탁운용사다. 점검 기준이 생기면 이 기록이 운용사 선정과 평가의 근거가 된다. 불리해지는 쪽은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쌓아 둔 회사와, 의결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해 온 운용사다.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나오면 다른 기관투자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0월 20일 의결한 기준에 맞춰, 내년 정기 주총 시즌 전에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취득 목적과 맞춰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자와 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행점검 세부 기준을 공개할 때 그 기준에 기후·인권 같은 지속가능성 관여 활동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집행 전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원칙을 국민연금 사례와 나란히 놓고 논의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이행점검이 '절차를 지켰는가'만 보면 형식 점검으로 끝난다.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기록보다 그 행사가 기업의 실제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또 이

번 지침 개정은 '장기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주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갈리는 안건에서 어느 쪽을 우선하는지는 이 지침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국, 2026-10) —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IMPACT ON (한국, 2026-10) — [국감 ESG 브리핑]공급망기금 91% 대기업에…제주는 "재생에너지 다음은 전력망"

측정이 자본의 입장권이 될 때 — 임팩트 측정 자동화에 10억 원, 국민이 매기는 사회적가치 점수

임팩트 측정 기업 마이오렌지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팁스) 일반트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 8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6,000만 원을 2년 동안 들여, 사회적 성과의 측정·검증·보고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플랫폼을 만든다. 회사는 지금까지 기업 사회공헌, 중간지원조직, 소셜벤처, 비영리 현장에서 4,300개가 넘는 성과 측정 체계 설계 데이터를 쌓았다고 밝혔다.

기존 수작업 컨설팅은 수천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들었다. 회사는 8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 제도(제16조), 공공부문 우선구매·우선위탁(제19·20조)을 명문화한 것을 시장의 근거로 들었다. 팁스 운영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가 생태계의 도약에 필수라고 말했다.

측정을 시민에게 여는 실험도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최종 발표 행사 '밸류업 데이'에 일반 국민 30명으로 청중평가단을 꾸린다. 청중평가단은 본선에 오른 10개 기업의 발표를 듣고 평가하며, 그 결과는 최종 심사에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현장 참석자는 '국민가치투자자'로 참여해 1,000만 원의 가상 투자금을 3개 기업에 나눠 투자한다. 공모전 총상금은 5,000만 원이다. 전문가가 매기던 사회적가치 점수에 시민의 판단을 일부 섞는 방식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4개 매체가 「임팩트 측정·impact measurement」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마이오렌지의 연구개발 규모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조항은 국내 사회적경제 매체 본문에서, 밸류업 데이 운영 방식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표를 옮긴 같은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16조가 가치 측정과 공시를 명문화하면서, 측정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 우선구매와 사회연대금융에 접근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마이오렌지의 사례는 측정 비용을 낮추는 기술 인프라가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밸류업 데이는 측정의 결과를 누가 평가하는가라는 질문

을 던진다. 국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하위 법령에서 측정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자기 사업의 변화이론과 원자료 위치를 정리해 두면, 어떤 표준이 정해지더라도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심층 — 측정 비용이 내려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마이오렌지 팁스 과제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16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밸류업 데이 · 인도 사회증권거래소)

왜 지금 중요한가. 임팩트 측정의 가장 큰 장벽은 비용이었다. 수천만 원과 수개월이 드는 측정은 큰 조직만 할 수 있었고, 작은 조직은 측정하지 못해 자금에서 멀어졌다. 기본법이 측정과 공시를 제도화한 지금, 측정 비용이 내려가지 않으면 법은 작은 조직에 새로운 장벽이 된다. 이번 주 인도 사회증권거래소 사례처럼 성과를 독립 검증해야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늘어날수록, 측정은 자본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 온 조직과, 그 자료를 표준 지표에 연결해 주는 기술 사업자다. 공공 우선구매와 사회연대금융 심사가 측정 결과를 요구하면, 자료를 바로 낼 수 있는 조직이 먼저 계약을 따낸다. 불리해지는 쪽은 측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해 온 조직이다. 용역 보고서는 한 번 쓰고 끝나지만,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매년 갱신되는 자료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동안 측정 표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국내 사회적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자기 사업의 성과 지표 3~5개를 정하고, 그 지표의 원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방정부는 측정 자동화 도구를 쓰는 조직의 보고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할 만하다. 11월 4일 밸류업 데이의 청중평가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도 공개하면 좋은 자료가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측정이 자동화되면 측정하기 쉬운 것만 남을 수 있다. AI가 원자료를 표준 지표에 자동으로 연결하면, 표준에 없는 변화는 보고서에서 사라진다. 마이오렌지 쪽도 측정의 본질이 수식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에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가 그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한다.

출처: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수개월 걸리던 수작업 컨설팅 끝낸다"...마이오렌지, 10억 R&D로 '임팩트 측정 자동화 플랫폼' 구축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사회적가치,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투자한다"...'밸류업 데이' 청중평가단 30명 모집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일본 생명보험사가 현장 노동의 생산성에 임팩트 투자를 했다. 다이이치생명은 제조·식품·숙박·물류 현장의 종이 장부와 매뉴얼을 디지털로 바꾸는 스타트업 가미나시에 임팩트 투자로 2억 엔을 넣었다. 투자 근거는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이다. 회사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종이 사용 감소를 사회적 성과로 정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보험사가 기후·의료가 아닌 '현장 노동'을 임팩트 투자 대상으로 정의한 사례다.

출처: 新日本保険新聞 (일본, 2026-10) — 第一ライフグループ、第一生命、【インパクト投資】株式会社カミナシへ投資

스페인 공적 개발금융기관이 국내 중소기업 임팩트 펀드에 출자했다. 스페인 개발금융공사(COFIDES)는 사회임팩트기금을 통해 목표 규모 1억 5,000만 유로의 레질리언스 파트너스 임팩트 펀드에 3,000만 유로를 약정했다. 성장기 중견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대고 검증 가능한 임팩트를 함께 요구하는 펀드다. 공공 기금이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전문 운용사에 출자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출처: Corresponsables (스페인, 2026-10) — COFIDES destina 30 millones a financiar pymes sostenibles y de impacto en España

홍콩거래소가 '녹색 기업' 지정 제도를 만들었다. 연 매출과 연간 투자의 50% 이상이 녹색 활동에서 나오고, 화석연료 관련 매출과 투자가 5% 미만인 상장사가 독립 심사를 거쳐 지정 표시를 받는다. 이사회 차원의 지속가능성 감독과 노동·안전 법규 준수도 요건이며, 매년 재심사를 받는다. 이번 호 첫 꼭지의 B 코프처럼, 이름표를 주는 쪽이 '매년 다시 확인'을 조건으로 건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HKEX Launches "Green Equity" Designation Program

브라질의 산림 파괴 감소가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됐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재단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3~2026년 아마존과 세하두의 산림 파괴 감소로 약 2만 2,300제곱킬로미터가 보존됐고, 온실가스 14억 9,000만 톤의 배출을 피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면 브라질 경제에 최대 1,920억 헤알, 세계 전체로는 1조 1,600억 헤알의 피해를 줄인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 호에 전한 자연 공시의 흐름과 함께, 자연을 지킨 결과를 돈으로 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 O Globo (브라질, 2026-10) — Queda de desmatamento na Amazônia e no Cerrado rendeu até R$ 192 bilhões para a economia brasileira, estima FGV

연료비가 이탈리아 제3섹터의 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토스카나 지역 7,750개 단체를 대표하는 제3섹터 포럼은 연료비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회원 단체들이 매일 제공하는 서비스의 20~21%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을 실어 나르고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아 연료비 상승이 곧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 지난 호에 전한 이탈리아 제3섹터의 고용 증가와 함께 보면, 일하는 사람은 늘어도 운영비 충격에는 여전히 약하다.

출처: Vita (이탈리아, 2026-10) — Caro carburante, Forum Terzo Settore Toscana: «A rischio il 20% dei servizi offerti ogni giorno»

05 이번 호 전망

> 이번 호 전망 없음 — 기한과 판정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후보 세 건 중 두 건은 시니어 기술 보도량에 관한 것이라 이 지면의 소재(임팩트의 주체·자본·제도) 밖이었고, 남은 한 건인 제3섹터 보도량은 형제지 커뮤니티 임팩트가 맡는 영역이라 싣지 않았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지난 4개 호에서 이 지면은 「몇 개월 뒤 한국에 닿는다」 같은 시기 주장을 4번 했지만, 판정 기준과 기한을 붙이지 않아 맞았는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은 채점에 넣지 않았고, 이번 호부터는 기한과 기준을 붙인 전망만 낸다.

07 편집장의 글

① 이름표는 한 번, 관리는 매년

이번 주에 가장 오래 남은 숫자는 콜로라도의 공익법인 3,000여 곳 가운데 정상 상태인 곳이 약 1,000곳이라는 집계였다.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는 '이윤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남기는 장치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등록한 회사 3곳 중 2곳이 몇 년 뒤 서류상 정상 상태가 아니다. 사업을 접은 곳도, 서류를 내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름표만으로는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비랩이 새 기준과 함께 전 세계 조직을 하나로 묶은 것도, 홍콩거래소가 녹색 기업 지정에 매년 재심사를 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도 신청 직전 6개월의 상태를 확인한다. 인증 이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일은 결국 조직 스스로의 몫이다. 이 지면은 앞으로도 '인증을 받았다'는 뉴스보다 '인증을 유지하는 방식'에 관한 뉴스에 더 무게를 두려 한다.

② 돈이 싸지는 조건이 바뀌었다

전환계획을 충실히 공개한 기업이 0.8%포인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결과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담당자에게 오랫동안 필요했던 숫자다. 지속가능성 보고는 비용이고 홍보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주 194개 기업 보고서 분석은 목표가 제 궤도인지 밝힌 곳이 33%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 줬고, 호주 직원 조사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14%였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같은 것을 묻는다. 약속은 들었으니 진척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워크데이처럼 지키지 못한 약속을 먼저 밝힌 기업이 다음 약속에서 신뢰를 얻는다. 한국의 1,000조 원 녹색 전환 자금도 결국 이 질문을 통과한 기업에 먼저 갈 것이다. 공시는 이제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의 문제다.

③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돈

영국은 화석연료 세수를 전환 기금으로 묶었고, 포드재단은 민주주의의 기초 조건을 지키는 데 기금의 방향을 맞췄고, 스페인은 장기요양 재정의 국가 분담을 법으로 정했다. 세 결정은 분야도 규모도 다르지만, 먼저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돈의 출처와 경로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국에서도 같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석탄화력 노동자 특별법은 2027년 9월 16일 시행일이 정해졌지만 재원 구조는 하위 법령에 남아 있고, 통합돌봄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이 다음 쟁점이며, 광명은 12월까지 지역에 남는 돈을 무엇으로 잴지 정해야 한다. 임팩트 업계가 할 일은 이 설계 과정에 숫자를 들고 참여하는 것이다. 선언은 많이 했다. 이제는 무엇을 지킬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낼지를 장부로 보여 줄 차례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5주 · 전문가판